

## 아산시 자치분권 교육교재

고 승 희

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연구위원  
kosh@cni.re.kr

이 연구는 아산시가 자치분권추진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분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재로써 아산시민들의 분권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

### CONTENTS

1. 연구목적
2.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
3.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현황과 문제
4. 분권에 대한 질문들
5. 자치분권을 위한 주요과제
6. 아산시의 자치분권 추진
7. 강의자료 PT

- 분권관련 질문을 중심으로 -

### 요약

- 본 연구는 아산시가 자치분권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분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자치분권의 성과를 높이고자 준비하는 분권교육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
- 지방자치는 주민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과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고 참여하여 처리하는 정치체도라 할 수 있음. 그러나,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열악한 지방재정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정책자율성이 저하되고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조직운영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지방정부 자율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
- 분권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비롯하여 분권의 수준과 필요성, 등 분권에 대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주요과제로 헌법개정, 자치와 분권에 대한 체계화, 지방재정의 확충,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량확보 및 지역주민의 의식과 태도변화가 필요시 됨
- 아산시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과 토크쇼 및 자치분권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제시하였음. 향후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서명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음



# 01 연구목적

## 1.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

-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에 얽매어 있는 지방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을 모색할 수 없는 수준임
-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와 개헌의지는 지속적으로 천명되어 왔으며 “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”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개헌을 위한 논의들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
- 지방분권은 국가기능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, 그리고 중앙 주도형 지역발전의 한계 극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
- 충남도에서는 정부의 분권추진에 부응하면서 자체적으로 도와 시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
  - 이에 아산시 또한 자체적으로 자치분권의 효율적 추진과 정착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들에 앞서 분권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이러한 아산시 자치분권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분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자치분권의 성과를 높이고자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준비하고 있음
  - 이는,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해 알리고 분권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분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것임
  - 따라서, 주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함

## 02

##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

### 1. 지방자치의 개념

- 지방자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과 자신들의 문제를 책임지고 참여하여 처리하는 정치제도
  - 즉,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그 지방의 문제와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

- 주체 -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반으로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
- 목적 -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
- 재원 - 스스로 조달한 재원
- 대상 - 지역적 사무
- 방법 -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

### 2. 지방자치의 기본요소

- 지방자치의 3대 구성요소 : 구역, 주민, 자치권
- 구역 :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, 공간적 범위
- 주민 : 참정권을 행사하고 자치비용을 부담하는 인적구성원
- 자치권 :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자주적 통치권
- 사무 :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
- 자치기구 :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

### 3.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사무

#### 1) 지방자치단체의 유형

-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
-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자치단체 이외에 교육위원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존재
  - 광역자치단체 : 특별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광역시, 도 - 17개('17. 2 기준)
  - 기초자치단체 : 시, 군, 자치구(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) - 226개('17. 2 기준)

#### 2)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
-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시설 및 지역개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이에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
- 고유사무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(예 : 상하수도사무, 지방세 과징사무 등)
  - 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
  - 단체위임사무 :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되는 사무로 의회 및 주민의 관여 가능
  - 기관위임사무 :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로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와 주민의 관여 불가
  - 재원의 일부만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

### 4. 지방자치의 가치와 필요성

#### 1) 지방자치의 가치

- 정치적가치
  - 정치권력의 집중 방지
  - 민주주의 체험과 학습

- 지방의 인물 발굴 등

○ 경제적가치

-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경제의 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

○ 기술적가치

-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구분
-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실행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 촉진

○ 행정적 가치

- 지역의 종합행정 역량을 확보
-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실적합적 행정
- 참여민주주의의 확대
- 중앙정부의 과중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

## 2)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필요성

- 지방공무원의 사기, 창의성, 책임성을 향상
- 주민참여기회의 확대, 민의의 반영, 신속한 행정처리,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
- 민주정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체제의 확립에 기여

## 03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현황과 문제

### 1. 열악한 지방재정

#### 1) 불균형적인 재원배분 구조

- 중앙-지방 간 재원배분은 8:2 구조로 지방정부는 이전재원에 의존
  - 지방정부는 자체수입보다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구성
- 재원의 실질적 사용비율은 4:6으로 재원의 배분과 집행이 불균형

#### 2) 자주재원 미흡

- 자주재원의 확충방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
  - 지방세 비중의 하락 및 보조금 증가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부담액 증가 등

#### 3) 세출부담의 가중

-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
  - 국가책임의 기본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및 단순집행 기능 수행이 중점
- 국고보조율 하락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
  -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와 보조율 하락에 따른 부담 가중
-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지방부담 전가
  -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

## 2. 지방행정의 자율성 한계

### 1) 지방정부의 정책자율성 저하

- 지역적 현실에 부합한 지방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해 법률의 위임사무 과다
  - 제도적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추진하고 해결할 수 없는 한계 발생

### 2) 자치입법권의 한계

- 현행 법률의 범위내에서만 자치입법권 인정
  - 지방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자치입법권으로 변경 불가
  - 위임사무 및 자체사무에 대한 세세한 지침에 따라 독자적 정책 추진의 한계

### 3) 지방정부의 자율적 조직운영권 미흡

- 지방정부의 특성에 부합된 다양한 조직운영이 필요하나 이의 권한 한계
  -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법률로 규정



## 04

## “분권”에 대한 질문들.....

### 1. “분권”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?

○ “분권”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.

- 나눌 분(分) + 권력 권(權), 즉 권력을 나누는 것으로 정치행정적 권력과 재정권력 등 여러 가지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권력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
- 이러한 권력을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와 나누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분권을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가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.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며 이는 분권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- 즉, 분권은 지방자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### 2. “지방자치”, “분권”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미를 알아야겠어요?

-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무를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고 책임지는 제도입니다. 이러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토록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사회는 복잡다원화되어가는데 여러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요구를 모두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 없으며 처리한다 하여도 비민주적이거나 비효율적입니다.
  - 지방정부의 권한이 없이는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은 바로 주민입니다.
  - 무늬만 ‘지방자치’ 그것은 바로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.

### 3. “서울”과 “지방”을 구분하는데 맞는 것인가요?

- 지방은 중앙정부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과 구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.
  - 서울에 청와대와 중앙부처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서울이 곧 중앙정부는 아닙니다. 서울 역시 하나의 지방정부인 것입니다.
  - 서울을 비롯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지방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지방사람, 지방대학, 지방언론이라는 말 속에는 지방은 일류가 아닌 이류, 삼류라는 편견이 있는 듯 합니다.
  - 즉, 분권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의식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서울지역, 충남지역, 아산지역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.

### 4. 우리나라의 분권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?

- 각국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
  - 자치사무, 자치재정, 자치입법, 자치조직과 인사수준 등 분권수준을 진단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. 인구 1,000만명 이상인 유럽과 북미,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보다 분권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곳은 터키와 포르투갈 2개국 뿐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.
  - 7:3 =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입니다. 지방정부는 고유한 업무보다 중앙에서 위임한 업무를 더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
  - 8:2 =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입니다. 당연히 재정권을 지닌 중앙정부에 지방정부는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.
  - 우리나라는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.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없고 법령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경우 조례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입법권은 더욱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.
  - 이밖에 조직, 인사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. 지방정부가 실, 국, 본부 등의 숫자 하나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.

### 5. “지방분권”과 “지방분산”은 같은 개념인가요?

- “분권”은 “중앙집권”의 반대말이고 “지방분산”은 “수도권 집중”의 반대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.

- “분권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, 지방정부와 주민사이의 권한을 서로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문제라면 “분산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사이에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.

○ “분권”과 “분산”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.

- 과거 국가주도로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만 권력의 중앙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.
- “집권과 집중”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. 이를 해결하는 “분권과 분산”도 분리해서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.
- 분권은 하지 않은 채 분산에만 초점을 둘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 6. 우리는 작은 나라인데 분권이 필요한가요?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어 보이는데요

○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.

- 우리나라의 면적은 250여개국 중 109위 정도입니다만 인구수는 세계 26위, GDP규모는 세계 13위 정도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.
- 면적만 보더라도 스위스, 덴마크, 네덜란드 같은 곳은 우리보다 면적은 더 작지만 지방 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.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작은 나라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○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지방자치란 지방정부 더 나아가 지역이 자립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지역 간 여러 차이들이 있어 가장 중요한 재정력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 7.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“지방재정조정제도”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?

○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게 교부금을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.

-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등으로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낮은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해 지원합니다. 이는 국세로 지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○ 재정력이 높은 지방정부가 낮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.

- 교부세가 국세를 가지고 지역 간 재정균형을 맞추는 제도라면 이는 지방세를 가지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제도입니다.
- 지방자치는 ‘지역의 자립과 이를 통한 지역 간의 선의의 경쟁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

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## 8. 복지분야에 있어 분권은 주민의 입장에서 실이 더 많지 않을까요?

-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대다수 복지사업은 국가예산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도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.
  - 그러나,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사전협의 및 재원대책과정 없이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을 가중 시켰습니다.
  - 지방정부의 재정은 고려치 않고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파탄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.
- 보편적 복지는 국가, 대상이 한정적인 선별적 복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.
  - 모든 복지제도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.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할 일, 지방정부가 할 일에 대한 분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-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:2입니다. 이로써 지방정부가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. 복지확대를 위해서도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## 9. 지방정부들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소식이 있어요.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간섭해야 하지 않을까요?

- 지방정부의 부패나 무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주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.
  - 지방정치인이나 지방공무원의 부패와 무능함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 문제삼아야 합니다.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. 지방자치에서 부패와 무능함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주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.
- 재원의 불평등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귀속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.
  - 국세와 지방세 비율 8:2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비율 4:6
  -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업무가 되어버립니다.
  -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보다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. 이런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하에 추진 할 수 밖에 없으며 지방정부를 귀속시키게 됩니다.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.

10.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나 정책에 무관심한데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 안되는 것 아닐까요?

- 자치분권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할 기회가 적은 것입니다.
  - 우리나라 주민들이 선진국보다 무지하거나 개인주의에 더 젖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. 지방자치를 민주주의학교라 하는 데 우리는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주민들이 지역현장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제대로 훈련하고 학습할 기회가 적은 것입니다.

## 05

# 자치분권을 위한 주요과제

### 1. 자치분권 중심의 헌법개정

#### ○ 헌법을 기반으로 한 분권추진 필요

- 헌법적 기초위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등을 보장하고 운영체계 및 사무, 재정 확보 등을 추진

### 2. 자치와 분권에 대한 체계화

#### ○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운영체계를 정립

- 분권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주민들과 공유
- 분권 추진목표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점검

### 3. 지방재정의 확충

#### ○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시 재정과 인력의 동반 이양을 통한 재정의 자립성 확보

#### ○ 지방소비세의 확대를 통한 재원보전

#### ○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

-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과 기본권 해당사업의 국가 책임 추진

#### ○ 보통교부세 교부율의 상향

- 국가보조사업의 정리를 통한 현행 교부율 상향

### 4.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량확보

#### ○ 지방정부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 필요

- 지방의 여건과 환경에 따른 조직운영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
-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자율성 요구
  - 자치사무 수행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토록 개선
  -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입법권에 대한 배분 필요
  - 지방정부를 정책기관, 정치기관으로의 역할 수행기반 조성
- 중앙-지방 간 기능재배분
  -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한 중앙-지방간, 광역-기초간 기능배분 필요

## 5. 지역주민의 의식과 태도변화

- 자치분권 수준은 지역주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 필요

## 06

## 아산시 자치분권 추진 실적

### 1. 제도마련

-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·지원조례 제정 : 2015. 5
- 아산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: 2016. 11

### 2.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

- 분권교육 : 공무원 3회, 시민 2회
- 자치분권 공감 토크쇼 1회

### 3. 자치분권 과제발굴 추진 및 실현

- 자치분권 과제 발굴 보고회 : 1회(24건)
- 자치분권 과제 발굴 콘테스트 : 1회(45건)
- 자치분권 발굴 과제 충남도 및 전문가 의견 수렴
- 자치분권 법령정비 과제 건의 : 19건(법제처)

### 4. 2018년 추진계획

- 자치분권 시민 공감대 확산
  - 찾아가는 자치분권 교육(읍·면·동)
  - 자치분권 홍보 버스킹 개최
- 지방분권개헌 서명운동



07

아산시 자치분권 강의자료  
- 분권관련 질문을 중심으로 -

**자치분권의 시작은 ?**

**자치분권 바로 알기**

## 0 | “분권”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

### 1

**분권(分權)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.**

- 나눌 분(分) + 권력 권(權), 권력 = 정치행정권력, 재정권력 등
- 누구랑 나누는가?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그리고 지방정부가 시민들과

**분권을 하는 이유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.**

- 지역문제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책임지고 해결 => 지방자치, 주민자치
- 분권은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

## 0 | “지방자치”와 “분권” 의미를 알아야 겠어요

### 2

**스스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합니다.**

- 지방자치: 스스로 조달한 재원으로 지역사무를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해 처리하고 책임지는 제도
- 주인은 바로 주민

**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.**

- 여러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요구를 중앙정부가 모두 해결?
- 한계 존재... 비민주적이거나 비효율적
- “무늬만 지방자치” ≠ 분권

## 0 | “서울” 과 “지방” 을 구분하는데 맞는 건가요?

### 3

지방은 중앙정부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과 구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.

- 하나의 지방정부
  -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= 지방? ===> 뿌리깊은 편견
  - 지방사람, 지방대학, 지방언론 = 이류, 삼류라는 편견
- => 서울지역, 충남지역, 아산지역

## 0 | 실제 우리나라의 분권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?

### 4

각국의 지방자치 수준 평가 연구결과 우리의 자치수준은 매우 낮습니다.

- 분권수준을 진단하는 여러 지표
- 인구 1,000만명 이상 지역 우리보다 낮은 곳 2개국(터키, 포르투갈)
- 7:3 =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
- 8:2 =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
-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조례를 제정 → 지방의 입법권 유명무실
- 조직, 인사분야도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통제

## 0 | “분권” 과 “분산 ” 다른 개념인가요?

### 5

“분권” 은 “중앙집권” 의 반대말이고 “지방분산” 은 “수도권 집중” 의 반대말입니다.

• “분권” = 중앙정부와 지방정부,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의 권한을 서로 어떻게 나누는지

: 분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?

“분권” 과 “분산” 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.

• 과거 국가 주도로 급속한 산업화 = 고도의 경제성장 but 중앙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

• ‘집권과 집중’ 이를 해결하는 ‘분권과 분산’ 도 분리해서 다룰 수 없는 문제

## 0 | 작은 나라인데 분권이 필요한가요?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

### 6

우리는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.

• 면적은 250여개국 중 109위 정도입니다만, 인구수는 세계 26위, GDP 규모는 세계 13위

• 스위스, 덴마크, 네덜란드 더 작지만 지방자치가 발달

• 지방자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작은 나라는 미존재

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• 지방자치란 지역이 자립하는 것 =>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

• 지역 간 재정력 차이 발생

•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여 해소

## 07 |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“지방재정조정제도”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?

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게 교부금을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.

-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낮은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해 지원 ⇒ 교부세 등
- 국세로 지방을 지원

재정력이 높은 지방정부가 낮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.

- 지방세를 가지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제도
- ➔ 지방자치는 ‘지역의 자립과 이를 통한 지역 간의 선의의 경쟁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확보

## 08 | 복지분야 분권은 주민입장에서 실이 많지 않나요?

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대다수 복지사업은 국가예산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도 일정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.

-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사전협의 및 재원대책과정 없이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을 가중
- 지방정부의 재정은 고려치 않고 정책을 추진

보편적 복지는 국가, 대상이 한정적인 선별적 복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.

- 중앙정부가 할 일, 지방정부가 할 일에 대한 분담체계를 확립
- 국세와 지방세 비율 8:2 ⇒ 지방정부가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 문제

## 09 | 지방정부들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간섭해야 하지 않을까요?

지방정부의 부패나 무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주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.

-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
- 지방자치에서 부패와 무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**주민의 의무이자 권리**

재원의 불평등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귀속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.

- 국제와 지방세비율 **8:2** /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비율 **4:6**
  -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업무?
  -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→ 지방정부를 귀속
- **분권(재정분권)**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

## 10 |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나 정책에 무관심한데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 안 되는 것 아닐까요?

자치분권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할 기회가 적은 것입니다.

- 지방자치 = 민주주의 학교
- **자치분권**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민주주의를 제대로 **훈련하고 학습할 기회**가 적은 것

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권과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고 자치분권체계를 만들어야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**자치분권 제대로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!!**